

민주 “총경 보복 인사·국힘 전당포기대회” 맹폭

고민정 “반기면 보복 공포 심어” “유승민·나경원·안철수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근 경찰 총경 인사와 국민의힘 당권 경쟁 등을 망라해 대정부 파상공세를 펼쳤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총경 인사를 언급하며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 전

국 서장회의의 참석자들에게 대한 문책성 인사가 있었던 주장이 나온다”며 “28명은 경정급 조직에 해당하는 직책에 발령 났고, 12명은 통상 임기 1년이 기준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경찰서장을 역임한 총경 보직을 거친 사람을 한 계급 아래인 경정급 보직으로 강등시킨 것”이라며 “경찰 내부 계서판엔 보복성 인사란 글이 상당

수 계시됐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경 이하 인사는 경찰청장 권한이지만 이번 인사엔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내부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인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복종하지 않으면 보복을 한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경찰국 설치 관련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을 112 상황실장 등 경정 자리에 배치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이상민 행안부의 블랙리스트”라고 말했으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당포기 대회인가, 전당포기 대회를 하나”라며 “유승민 죽고, 나경원 죽고, 이제 안철수마저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친윤계의 비판을 소개하며 “그럼 이런 반정부 인사, 반국방 인사와 단일화를 한 건가. 후보 단일화한 건 친북, 반북 좌우합작, 국공합작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행안부 “고향사랑의 날’ 지정해 주세요”

내달 2일까지 날짜 대국0민 공모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국민이 직접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국민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1차로 제안하면 전문가 2차 심사를 통해 5개 후보를 선정한다. 3차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로 확정한다. 5개 후보군을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3차 대국민 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도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온국민소통(onsotong.go.kr)’과 공모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의 날이 확정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고향사랑주간(3일)과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및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가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 장려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 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수원시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해 기부 가능하다. 서울=김선욱 기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건설현장 점검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구청 안전총괄과 직원, 현장 관계자들이 8일 북구 온암동의 한 주상복합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광주 북구 제공

국·사립대 교수 1056명 “대학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

교수연대, 시국 선언문 발표 “시장 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

국립·사립대 교수들이 8일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국·사립대를 막론한 교수 단체들이 단일 대학 정책을 주제로 공동 선언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단연대회의’(교수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 질을 정의하는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으로,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이를 ‘4대 요건’이라 부른다. 시국선언문에는 교수 1056명이 서명했다. 교수연대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

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수연대는 선언문에서 교육부가 내놓고 있는 대학 규제 완화책을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으로 규정했다. 교육·연구 주체인 교수는 피해를 보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에게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교수연대는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 확보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실력 있고 유능한 연구자가 대학을 외면하도록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교육부가 발표한 4대 요건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전체 교

원의 3분의1까지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의 5분의1 대비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할 때 교원확보율을 조정 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정규 교수보다 비정규 교수를 더 뽑을 수 있도록 해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수연대는 “대학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점은 경쟁력의 약화”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도 대학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을 외면하고 경시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 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김선욱 기자

중부세 부담에 분납 신청자 7만명... 5년새 24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밝힌 인원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년 2907명에서 2018년 3067명이었다가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상향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 지난해 총분납 신청 세액은 1조5539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3722억 8100만원의 4.2배로 급증했다. 중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매년 12월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희재,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사진)은 8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 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 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받

은 기관들이다.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할 산업단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권한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지원 “선택적 적용 광상도 무죄, 野 잘한 이상민 탄핵”

박지원(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광상도 전 의원의 재판을 “공권력의 선택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8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만약 지금 DJ였다면’ 초청 강연회에서 “곽 전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무죄를 받았다”며 “이런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에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다”며 “좋은 신문과 방송을 보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며, 투표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원광대 학생들을 향해서 “대통령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며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라면서 “대통령이 잘못되면 지적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탕평인사, 정제되고 검토된 언어 사용, 영부인 부속실 신설을 통한 공적 임무 대응, 신속한 사정 등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더라도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해나 기자